

# 넥슨, 의견 대립에도 강남 부지 매입

### 우병우 청와대 수석 일가 부지매입에 넥슨재팬 자금 투입 · 1년4개월만에 부지 매각... 의혹 증폭

넥슨이 경영진 내부 의견차에도 강남 부지 매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넥슨은 부동산 거래를 위해 넥스코리아가 아닌 넥슨재팬 자금까지 동원한데다 1년4개월 만에 큰 이윤없이 부지를 매각해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넥슨은 1994년 한국에서 설립됐지만 2011년 12월 해외사업 강화를 이유로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서 넥스코리아와 넥슨재팬(주)넥슨)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김정주 창업자는 넥슨 지주회사 NXC 대표로서 산하 법인을 경영하고 있다. 본사는 넥슨재팬으로 대표이사는 외부 인사인 오웬 마호니다.

실적 발표나 중요한 투자 결정 등은 넥슨재팬 이사회에서 이뤄진다. 넥슨은 지난해 불거진 엔씨소프트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엔씨소프트 지분을 엔화로 갖고 있다 매각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뉴시스가 확보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문제가 된 우병우 청와대 수석일가 강남 부지 매입 과정에서 넥슨재팬이 활용됐다. 넥스코리아는 2011년 3월 18일 우 수석 일가와 문제가 된 강남 부동산을 1325억9600만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0월 13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같은날 넥스코리아와 넥슨재팬은 이 부동산을 담보로 일본 미쓰이스미토모은행과 채권 최고액 130억원 규모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업계에서는 넥스코리아가 2011년 기준 3000억원이 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넥슨재팬까지 채무자로 세워가며 일본 은행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조달한 것을 두고



**T맵 전국민 무료화 선언**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세빛동동성 앞에서 모델들이 SK텔레콤 T맵을 선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날부터 기존 자사 가입자뿐만 아니라 KT, LG U플러스 가입자도 T맵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민 무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넥슨이 일본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일본법인을 활용해 자금을 동원한 데는 그만쯤 피치못할 상황이 생겼던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넥스코리아는 2012년 7월 17일 리얼케이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와 1505억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달만인 9월 27일 거래를 완료한다.

이 과정에서 넥슨재팬뿐 아니라 넥

스코리아 경영진 내부에서도 강남 부지 매입과 강남 신사옥 건축 반대하는 의견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교로 사무를 이전하기로 결정된 상황에서 강남 신사옥의 당위성이 떨어지고 게임 이외의 시설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 부동산 매입시점은 넥슨의 광고 사옥 준공까지 3년이 채 안 남은 상황이었다.

넥슨은 외화까지 빌려오면서 추진한 강남역 신사옥 계획을 1년 4개월 만인 2012년 7월에 포기하며 부지를 되팔았다. 시세차익은 80억원 정도이지만 67억3000만원의 취득·등록세와 철수 비용을 감안하면 현명한 투자는 아니란 것이 부동산업계 중론이다.

이 때문에 넥슨의 강남 부지 단기매매에 대한 식연치 않은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인진수 기자

# 이주열 “경제 어려움, 통화정책만으로 해결 한계”

### “거시건전성 정책 · 구조개혁 정책 등과의 효율적 정책조합과 국제공조가 중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각국 경제가 지극처럼 다면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 메이플룸에서 한은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피터슨연구소(PIIE) 등이 공동 주최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통화정책 운영’ 콘퍼런스에 참석해 “거시건전성 정책, 구조개혁 정책 등과의 효율적인 정책조합과 국제공

조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들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면서 거시건전성 리스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야 하겠지만 금융 안정이 저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의 경우 대외 충격이 발생하면 자본유출과 통화가치 절하가 급격

히 진행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구조개혁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복원력을 강화한다면 거시경제정책 완화의 정도를 과도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의 영향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면서 “주요국이 경기부진을 타개

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 왔지만, 대부분 국가가 구조적 요인 등으로 인해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국제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현정책 원장은 “신흥국은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우선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해 정책의 효과가 실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높아진 불확실성은 신흥국의 급격한 자본유출뿐만 아니라 높은 환율변동성을 일컫는다”며 “급격한 환율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인진수 기자

# 버팀목전세대출 인터넷으로 받는다

### KB국민은행, 은행권 최초로 시행

KB국민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주택도시기금 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한 인터넷대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인터넷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업점 방문 없이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확인서류 등을 구비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함께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 과정을 처리하면 된다. 버팀목전세대출은 정부에서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전세자금 용도의 저금리 대출이다. 대출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이고 대출한도는 수도권 기준 최대 1억4000만원이다.

대출 대상자는 대출신청일 기준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이면서 최근 1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원의 발급이 가능한 근로자 또는 현재 영위 중인 사업에 대해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이 가능한 자영업자 등이다. /인진수 기자

# 농협금융도 코코본드 발행 가능해진다

### 금융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NH농협금융지주도 조건부 자본권(코코본드) 발행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바젤Ⅲ 시행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자기자본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코코본드 발행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코코본드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사채의 원리금이 상각되는 조건이 붙은 특수한 채권을 말한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코코본드 발행근거가 없어 자본시장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에 대해서만 코코본드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상장하지 않은 농협금융은 이로 인해 코코

본드 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 조정으로 인해 농협금융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 코코본드 발행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코코본드 전환으로 주식 보유현도를 초과해 대비한 장지도 마련했다.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코코본드에 투자할 경우 예기치 못하게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 보유현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주식 보유현도는 동일인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비금융주력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4%다.

개정안은 주식 보유현도 초과 즉시 초과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일정기간 내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의결권을 되살릴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금융위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초과분은 처분해야 한다. /인진수 기자

# 중소기업계, 대기업 자산총액 10조원 상향 ‘우려’

중소기업계가 대기업집단 기준 자산총액을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13일 공정거래위가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금액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릴 경우, 65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대기업 기준에서 벗어나 계열사 간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가능성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유통산업발전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38개 관련법에 원용됨에 따라 지정 해제되는 대기업집단이 준대규모집단이나 공공소프트웨어 조달시장 참여 제한 등의 규제에서 벗어난다”며 “골목상권 침체 등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마찰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인진수 기자



##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중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